

01 여는 그림

02 (책을 열며) 17대 국회에 바란다 - 홍근수

03 (특집) 신한미동맹과 미군감축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빛나간 안보 조합, 주한미군 재배치와 협력적 자주국방 - 정육식

- 신한미동맹과 협력적 자주국방문제 - 이철기

-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 고영대

04 (번역자료) 소녀의 기도로 불리는 사전협의제도

05 (세계평화운동 동향) 팩스 크리스티 평화 회의를 다녀 와서 - 변연식

06 (통일) 북핵 프로그램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 불러올까? - 이재봉

07 (군산소음피해 배상소송) 군산 미공군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서 알아본다 - 우경선

08 (비에케스) 싸움은 계속된다 - 고이지선

09 (지역소식) 안녕하세요? 전국의 평통사 회원, 후원회원 여러분 - 유한경

10 (자주연합의장 인터뷰) 이행우 자주연합 의장님과의 대담

11 (회원탐방) 류성훈

◆책을 열며◆

17대 국회에 바란다

상임대표 홍 근 수

17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16대 국회와 대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선 정치지형이 바뀌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어 제 1당이 되었다든지, 민주노동당이 제 3당으로 원내에 진출하였고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에도 뒤지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 등이 다르다. 외관상으로 볼 때 17대 국회는 16대 국회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나 17대 국회 초기부터 상임위 구성문제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 식구 감싸기로 부결되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나올 예정이어서 16대 국회와는 다를 것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아주 불행한 일이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썩고 무능한 정계의 현실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는 국회에 들어가서 처음 속을 들여다 본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원내 대표의 말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그는 17대 국회의 성격에 대하여 제도 정치권은 이미 식물국회가 돼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국민 스스로 촛불을 들고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우리가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17대 국회는 그리 기대할 것이 못 된다.

17대 국회는 단순히 새로운 총선에 의해 새롭게 출발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국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17대 국회가 형식으로만 16대 국회와 다른 국회가 될 수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17대 국회는 첫째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가 될 것을 주문한다. 이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명백히 하여 천하의 악법으로 반세기 이상을 군림해 온 국가보안법은 그 운명이 다 한 것 같다. 이 악법을 확실하게 폐기해 주기 바란다.

둘째는 이라크 파병을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테러집단의 무도한 행위와 협박에 굴복해서나 김선일씨가 죽임을 당하여서가 아니다. 파병은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을 학살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도 복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중동지방에 얼씬도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익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라크에서 나는 석유를 싼 값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이번 전쟁으로 우리 나라가 팔자를 고칠 수 있는가? 또 우리 민족이 통일이라도 되는가? 그럴 공산은 전혀 없다. 파괴된 이라크 마을들을 재건하는 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 - 이는 피 값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 - 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라도 가능한가?

테러 위협 때문에 나라의 국책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불의이기 때문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듯이 그것이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면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한미동맹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의 협박이나 또는 압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다.

셋째는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문제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가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 해도 길이 기억될 것이다.

홍근수 목사님의 ꡐ현장의 소리ꡑ를 모은 『돌들의 외침』이 출간되었습니다.

빛나간 안보 조합, 주한미군 재배치와 협력적 자주국방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 옥 식

한미동맹 재조정을 계기로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맞고 있는 한국의 처지는 한마디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적지 않게 수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몰고 올 과장이 만만치 않다. 미국의 요구사항 목록에는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 한국의 방어작전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하고 이전 후보지역으로 확정된 평택 주민들의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명확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강화할 경우 한국이 불필요한 지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미동맹의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한국정부의 '딜레마'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협력적 자주국방'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은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변형'과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의 두 축을 이루고 있기에, 이를 통해 한국의 자주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더구나 군비증강에 기반을 둔 협력적 자주국방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예산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동맹이 대규모로 군비증강에 나서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인 북한과의 군사적 적대 관계 청산 및 군비축소,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변형'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근거 없이 안보공백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변형'을 '감축'이나 '재배치'와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이는 지난 3월 31일 레온 라포테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국 상원 증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포테 사령관은 이 증언에서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재편 방향으로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장비 현대화와 새로운 작전 개념 실행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3년간에 걸쳐 110억달러를 투입

해 해공군력과 정보력,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MD) 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대북한 선제공격 작전을 포함시킨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의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비롯한 '지역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 기지와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용산기지와 2사단의 후방 배치 및 일부 병력의 감축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주한미군의 변형이 상당 부분 완료되면, 미국은 북한의 보복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돼, 부시 독트린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군사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 변형'과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새로운 딜레마를 잉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 특히 군사적 대치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여전히 100만 대군을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70%를 휴전선 인근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한미연합전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대북 억제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반대로 북한의 군사력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만들고 군사적 신뢰관계를 넓히면서 군축과 평화체제를 이뤄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나가면 한국의 대미 협상력도 크게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커지고 있는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고 대등하고 건전한 한미관계를 열어가며 동북아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남북관계에 있다.

물론 군사,안보문제를 남북한 주도로 풀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위협 인식의 비대칭성'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이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남북한 주도의 군사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변화의 바람도 불어오고 있다. 이른바 '근본문제'라고 일컬어져왔던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군축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근거들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정치외교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일컫는 것도 이러한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남한도 협정체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군축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력을 밀집시킨 개성 일대를 '공단화'하면서 군사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킨 것이나 남한과의 장성급 회담을 수용한 것은 군사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의 진위와 협상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어렵다"는 기존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과의 대타협의 소지들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변형'을 두 축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보다는 '군축'이 자주성을 증진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분명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또 다른 군사력으로 매우겠다는 어설픈 자주국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 글은 『월간 피플』 7, 8월호 실린 글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편집한 것입니다.)

신한미동맹과 협력적 자주국방 문제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철기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본격화하면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공백론을 이용해, 맹목적인 자주국방론과 주한미군 전력증강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감축에 따른 전력보강을 구실로 110억달러의 추가 투자 등 주한미군의 군비증강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참여정부'가 내세워 온 '협력적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은 동전의 양면임이 드러난 셈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협력적 자주국방'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략틀에 더욱 견고히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략적 검토를 통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미국의 구상은 작년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공동서명에서 한미동맹관계의 장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재편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이라는 명분하에 미국무기의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의 MD체제에의 편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어 한국을 방문한 윌포위치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구실아래 미국 무기의 구매를 강요함으로써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의도는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변하고 있고,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신한미동맹'의 모습이다.

결국 한미동맹은 대중국포위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맞춰 지역동맹화하고,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견고히 편입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중국포위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중국전체를 주목적으로 하는 아시아지역군으로 개편되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2사단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려는 110억달러의 무기도 실은 대부분 패트리어트미사일과 같은 MD(미사일방어용)와 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대중국용 무기와 장비다. 중국포위전략이 구체화될수록 주한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오산평택에 50년이상 사용할 최첨단화된 영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미국이 지정해주는 무기와 장비의 구매에 혈안이 돼 있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비는 올해보다 무려 13.4% 늘어난 21조 4천 752억원에 달한다. 경제난 속에서도 올해 국방예산은 탈냉전후 최대인 8.1%나 증가했고, 전체 정부예산증가분의 60% 이상이 국방예산에 배정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간까지 5년동안 총 92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국방중기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기회 삼아 국방부는 구실이 없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무기구매계획들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한꺼번에 해치울 태세다.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부예산을 연간 GDP 비율 3.2%로 늘리고, 연간 20억달러(2조 4천억원) 씩 투입해 첨단무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연구원(KIDA)은 주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2010년까지 약 64조원, 향후 20년동안 약 20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신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할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미명아래 한반도 밖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 군이 동원될 수 있다. 미국이 치르는 침략전쟁마다 따라 다녀야 할 판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동원되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설령 우리 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직접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한국이 기지로 이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체제에 편입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무기들은 MD와 관련된 것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비롯해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PAC-3는 대표적인 MD 무기체제다. 이들 무기 도입은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국방은 고사하고, 미국의 군사체제에 공고하게 편입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고 X-band 지상레이더기지가 한국에 설치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크게 악화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편을 기하면서, 미일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일군사동맹관계는 이전보다도 한 단계 격상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부시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일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일동맹관계를 미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강화된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서 한미동맹을 끌어들이 이른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결국 동북아에 신냉전시대를 가져오고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통일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신한미동맹' 구상과 한국의 방향 없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매우 큰 위험성을 띠고 있다.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주국방은 존재할 수 없다. 자주국방이란 다름아니라 지금과 같이 미국에 종속적인 안보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자주국방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가 얼마나 독자적인 안보전략과 정책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오히려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력과 상호 군사적 위협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장사정포 같은 것이다. 남북간의 군사력 격차가 벌어질수록 북한은 이런 비대칭적 전력을 늘려갈 것이고, 핵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 보유에 대한 유혹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투자하여 첨단무기를 도입해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간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을 이루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대미종속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편과 성격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집 3◆

-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

평통사 정책 연구위원 고 영 대

냉전 종결 직후부터 미국이 추진해 온 주한미군의 이른바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이 최근 들어 한미 양국에 의해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게 되면 동북아 지역은 무한대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 준전시와 다를 바 없는 항상적인 전쟁위협에 놓이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난관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이와 같은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은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또 그 발동 요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된 제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런데도 최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이를 막으려는 투쟁에는 재갈을 물리게 되는 일부 논자들의 무책임한 주장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작금의 한미동맹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주동성을 상실하고 한미동맹의 퇴행적 결과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조문 자체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몇 가지 정황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불법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가 이미 동북아나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미국 측이 새삼스럽게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들고나올 필요가 없으며,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나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군의 작전도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로 되며, 이를 막으려는 한국 당국의 의도가 오히려 불법적인 것으로 되고 만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구태여 어려운 공론화 과정을 밟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에 그 불법성의 근거를 조약과 관련 문서를 토대로 밝혀 보자.

1. 본 조약 및 관련 문서상의 규정

1) 본 조약의 규정

① 조약의 적용범위는 각 당사국의 영토로 한정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란 북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만의 영토를 의미한다. 또한 '행정 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가 의미하는 바는 당시 북진 통일을 외치던 이승만 정권이 무력공격으로, 곧 불법적으로 북한 또는 그 일부 지역을 점령했을 때 미국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이 지역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는 대한민국 밖의 무력 충돌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 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에 대해 적용할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많은 논자들의 혼란과 확대 해석도 상당 부분 여기서 비롯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미국에 적용할 경우 그 적용 범위는 미국 본토와 태평양 상의 미국 영토, 곧 하와이나 오키나와(73년 일본에 반환되기 전), 괌 등이 해당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본토나 태평양 상의 미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로 국한될 뿐, 미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지 않는 동북아시아나 태평양, 그 밖의 다른 지역은 결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논자들은 태평양 상의 미국의 영토를 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가 마치 태평양 지역인 양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②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 영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만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¹⁾도 있다. 이 견해에 의거하게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 당연히 미국 본토와 태평양 상의 미국의 영토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본 조약의 체결 배경 및 당시 대한민국의 조건과 능력,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과 갈등 때문에 이승만 정권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을 만큼 미국은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또 조약 체결 당시 북한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점, 휴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는 이승만이 공공연하게 북진무력공격을 내세우는 등 전쟁 상태와 다를 바 없었던 점,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군대조차 유지할 수 없는 당시 남한의 조건 등을 생각한다면 미국에 대한 방위가 남한의 과제나 의무가 될 수는 없었다.

더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행정 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라는 규정은 미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표현으로 봐야한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향후 미국의 행정 지배 하에 들어오게 될 영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형식적으로는 쌍무조약적 성격을 지니나 내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 의무를 규정한 편무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편무적 성격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에 대한 전국토 무상 공여와 일방적, 배타적 주병권을 허용한 4조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편무조약의 예로는 1951년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구 일미안보조약을 들 수 있다. 미국에 의해 무장해제된 일본은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질 능력이 없었다. 이에 구 일미안보조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일하게 제1조2)에서 주일미군에 대한 전국토 무상 공여와 일방적, 배타적 주병권을 허용하였다.

1960년의 신 일미안보조약 역시 편무조약이다. 당시 일본은 자위대3)라는 무장력은 갖췄으나, 집단자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 규정상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쌍무조약적 형식을 띠었으나 사실상 편무조약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 일미안보조약이 그 적용 범위를 제5조에서 '일본국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명확히 확인된다.

그런데 신 일미안보조약은 제4조에서 "일본 또는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하여 제6조4)에서 규정한 주일미군의 주둔 목적과 역할을 일본이 뒷받침하고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이 쌍무적 성격을 갖도록 보완하고 있다.

또한 신 일미안보조약은 구 일미안보조약이 보장한 주일미군에 대한 전국토 무상 공여 및 일방적, 배타적 주병권을 부분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신 일미안보조약은 공여될 시설과 구역을 하위 협정에서 규율하기로 하는 한편 임대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후일 비록 허용뿐만 아니라 입증되었지만, 주일미군의 일방적 주병권을 제약할 수 있는 '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도 교환하였다.

이와 같이 구, 신 일미안보조약과 비교해 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편무조약적 성격은 더욱 뚜렷이 부각되며, 이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도 미국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된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편무조약이 아닌 명실상부한 쌍무조약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태평양 상의 미국 영토로 국한될 뿐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2) 조약 관련 문서상의 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한미 양국은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체결 직전까지 심각한 갈등

을 빚었다. 곧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국한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한반도로 확대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막판까지 충돌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의지가 관철되었는데, 조약 관련 문건과 체결 과정에서의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국한시키려는 당시 미 행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체결된 미국 측 양해사항(교환의정서)은 "미국은 위 조약 3조에 의거하여 일방국이 외부로부터 무장된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국을 원조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현 조약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인도될 것으로 미국이 시인한 영토에 대하여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원조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하한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남북 무력충돌 결과 남한 영토로 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적용 범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약 3조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승만 정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에 "한국의 영토로부터 중공 침략자들을 몰아내는 권리를 포함하여 한국의 내정문제에 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5) 라는 구절을 반영시키고자 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당시 이승만 정권의 무력공격을 막기 위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북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인민지원군과 나아가 소련, 곧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은 어디까지나 북한 지역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핵심 쟁점으로 하였으며 한반도를 넘어 서서 동북아나 태평양을 적용 지역으로 고려할 처지나 조건,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있다는 견해, 곧 동북아나 태평양 지역이 적용 범위가 아니라는 견해는 보수적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장되어 온 것으로,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90년대 초의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비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작성된 한 연구6)는 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7)를 "한국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그의 육,해,공군의 병력의 한국 내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여 받는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역할 및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가 동북아나 태평양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에 토대하여 나온 주장이다.

또한 한 연구자8)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와 미국 본토 및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영토로 보고 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신일미안보조약 제4조와 달리 '극동지역'의 문제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한민국이 극동지역의 방위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협의 대상에 극동지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역시 극동지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3) 현 한국 정부의 입장—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정하는 입장이다. 지난 해 10월 초의 제5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의 근거로 들었고, 한국은 외통부 조약국의 논리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중앙일보, 2004, 1, 27). 그러나 한국은 결국 범리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허용하는 정치적 합의를 해주었다.

최근 주한미군의 감축이 공론화된 후 반기문 장관 등 외통부 관료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그 적용 범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로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있다.

4) 조약의 전문 및 2조9), 3조에서 표현된 '태평양 지역' 또는 '외부로부터'의 용어가 갖는 의미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태평양'이란 용어를 들어 적용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 일부 논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없이 피상적이고 자구에 매달린 주장일 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떤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등의 표현이 나온다.

조약의 전문은 일반적으로 조약 체결의 목적과 지향 등을 담고 있다. 전문의 '태평양'이라는 용어는 '평화기구를 공고히' 한다든지 '공동으로 방위한다'든지,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조직을 건설한다'는 등의 조약 체결의 포괄적인 목적과 지향을 담기 위해서 사용된 일반적 표현이지 적용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이 그에 앞서 체결된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전문에서 거의 그대로 따왔다는 사실도 전문의 '태평양'이라는 표현이 적용범위가 아니라 조약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전문의 '태평양'이라는 용어는 각 조약에 고유한 적용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다.

한편 제2조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란 표현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2조의 내용에 따라 조약 발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적용 범위를 규정한 표현이 아니다. 이 규정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출동, 작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조의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라는 표현도 2조의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

2. 실천적 대응 방안 모색

1)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불법성 및 파괴적 후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적 대응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이 가져오게 될 국가적, 민족적 위기와 후과가 어떠한지라는 것은 앞서 지적하였다. 북한은 물론 중국도 이미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대중 선제공격작전 수립에 따른 양안관계의 긴장 고조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과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한미동맹의 전환은 아직 그 출발점에 서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전환이 민족의 자주와 통일에 기여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만성적인 동북아 군비경쟁과 전쟁 위협 및 외세의 개입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맡기는 퇴행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시민사회운동단체, 특히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와 이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불법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저지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 투쟁을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자 한 고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한계와 문제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감축이 공론화되면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입출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저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군축으로 귀결되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촉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주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이 갖게 될 허구성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미 양국은 신 일미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주일미군의 배치와 장비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을 체결하였다. 이는 구 일미안보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일미군에 대한 일방적인 주병권을 허용한 데 따른 문제점(10)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일본의 의중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다.

신 일미안보조약은 6조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을 극동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에서 발진한 미군 전투기를 베트남전과 걸프전에 참전시켰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용인하였다. 주일미군의 역할을 극동 지역을 넘어 확대시키려

는 미국과 일본 당국의 정치적, 군사전략적 의지 앞에 신 일미안보조약이나 관련 '교환공문'은 아무런 제동장치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사전협의 자체가 지닌 한계도 '교환공문'을 사장시킨 한 원인으로 되었다.

'교환공문'을 이행하기 위해 일미 양국이 사전협의 하기로 한 사항은 병력 배치의 중요한 변경, 장비의 중요한 변경, 극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일본 기지의 사용 3개 항목이다. 또한 병력 배치에 대해서는 육군 1개 사단 정도, 육군에 상응하는 공군, 1 기동부대 규모의 해군 병력을, 장비 변경에 대해서는 핵탄두 및 중,장거리 미사일의 반입 및 기지 건설을, 극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일본 기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투작전행동만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하기로 양국 간에 양해하였다.

그러나 '교환공문'과 양해사항은 공문구(11)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세부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의미가 없는 것이거나 편법을 이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 줌으로써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 기동부대 규모의 해군 병력이란 미 7함대 정도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보다도 규모가 작은 주일미군은 사전협의의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 핵무기 반입과 관련해서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전략폭격기와 같은 핵,비핵 겸용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핵무기 장착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사전 협의 없이도 이들 장비를 통한 핵무기 반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심지어 핵무기를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기항하는 경우는 사전협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극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일본 기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협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우선 전투작전행동만 사전협의한다는 것은 이동, 기항, 정찰, 정보, 경계, 보급 등의 작전행동은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전투작전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전투작전명령이 일본의 영해나 영공에서 발령되지 않는 한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때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이 일본 기지에서 발진하여 각각 북한과 남한으로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영공과 영해를 벗어나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이유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 및 감축과 관련하여 뒤늦게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일본의 40년에 걸친 사전협의제의 운용 결과를 볼 때 아무런 실효성 없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대안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그것은 현 정부가 일본보다 나은 사전협의제를 미국에 관철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설령 사전협의제를 관철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상징적인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전협의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4조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해 전권, 곧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입출입 규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모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공문구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실로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전협의제가 아닌 '사전동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신 일미안보조약 체결 당시 미국에 사전동의제를 요구하였으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이렇듯 주한미군에 대한 입출입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감축, 그리고 한미동맹의 전환기에 대한 결코 올바른 대처 방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거나 늦춰보려는 친미수구세력의 의도를 결과적으로 대변해 주는 주장으로 될 우려가 크다.

3)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새로운 공동선언 채택 또는 하위 법체계를 통한 우회 전술 가능성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의 불법성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하위 법체제로 이를 보완하거나 또는 일본과 같이 새로운 공동안보선언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에서 나온 공식, 비공식 주장을 보면 한국은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되 하위 법체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 측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한편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한미공동안보선언'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방향이 될지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손쉬운 하위 법체계의 정비나 새로운 공동안보선언의 채택을 통한 보완에 나서려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는 국민 자주의식의 성장과 운동의 고양,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그 향배가 가름될 것이다.

법 규정보다는 국민 의식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가 다시 한 번 말해준다. 60년 대 초 안보투쟁이 실패(63년 '안보공투' 해체)로 돌아가자 미국은 극동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 일미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공군을 베트남으로 출격시켰다. 나아가 주일미군은 태평양 지역을 뛰어 넘어 걸프전까지 참전하였다. 그런데도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이나 법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미 양국이 이를 보완한 것은 신 일미안보조약이 체결된 지 36년이나 지난 1996년에야 이루어졌다. 그것도 냉전 해체라는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완 또는 해체시킬 것을 우려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설득하여 '일미안보공동선언'을 체결한 것이다. '일미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일미 양국은 신 일미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극동 지역을 벗어난 주일미군의 작전 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렇듯 일본은 안보투쟁의 패배 이후 사회운동이 약화되어 가면서 일미안보조약마저 지켜내지 못한 채 일미 양 당국의 자의적인 법 운용을 허용하였으며, 결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공동의 군사적 패권 추구를 뒷받침해 주는 퇴행적인 방향에서 신 일미안보조약을 개약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밝힌 대로 한미 당국은 현 한미 관련 법규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하위법을 통해 상위법을 보완하는(?)—실제로는 위배하는—방식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동북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이미 무너져 있는 한미관계 법체계를 더욱 엉망으로 만듦으로써 중, 장기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군으로 전환되면 대한민국 방위만을 전제로 하여 '전국토 무상 공여' 원칙과 일방적 주병권을 적용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으며,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를 덮어두고 하위 법체계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허용하는 불법적 상태와 반국가적 폐해를 지탱해 나가기에는 한국 정부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될 것이다.

또한 신법으로 구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려는 '한미공동안보선언'의 방식 역시 이것이 조약의 본질적 성격을 개정하는 '의정서'로서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채택 또는 비준 전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 양국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미공동안보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사협정으로 채택된다면 이 선언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력을 갖게 되므로 선언이 의미는 훨씬 감소된다. 이렇게 볼 때 한미 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족적 동력, 일본에 앞서는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투쟁력 등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약을 저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나 국민들이 여전히 안보이데올로기공세에 갇혀 있고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힘이 당국과 친미수구세력의 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에 민족민주진영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투쟁에 주도면밀하게 전력 투구해 나감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드리울 암운을 거둬내고 반드시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질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1) 백봉중, '한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 1985, p 10.

그러나 백봉중은 이 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대해 방위 의무를 갖지 않는 근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

2) 구 일미안보조약 제1조 : 평화조약 및 이 조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일본국내 및 그 부근에 배비할 권리를 일본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군대는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고 더불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부 국가에 의한 교사 또는 간섭에 의하여 발생한 대규모의 내란 및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주어지는 원조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일본의 자위대는 1954년 7월 1일에 창설되었다.

4) 신 일미안보조약 제6조 :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여 받는다. 전기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일본 국내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는 1952년 2월 28일 동경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일본국간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근거한 행정협정에 대신하는 별도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5) 정준호 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1990.3. p. 26~27

6) 정준호 외, 앞의 논문, p 64.

- 7)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8) 김명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위에 관한 연구, 2003, 6, p 15~17.
- 9)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 10) 구 일미안보조약에 따라 주일미군은 일본 정부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병력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장비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었으며, 타 지역으로 제멋대로 출동할 수 있었다.
- 11) 타다미노루 (多田 實), 일미안보조약, 1982. 8, 일본, p 46~49.

◆번역자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입출입에 관한 사전협의제와 관련하여 일미안보조약 상의 사전협의제의 실상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미안보조약 해설』(타다 미노루, 1982년 발행)에서 발췌하여 싣는다. 번역은 평통사 편집부에서 하였다.

'소녀의 기도'로 불리는 사전협의제도

미국이 무책임한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됐다. 미국은 모범적인 나라로 신뢰할 만하다고 외무부 장관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나 완전히 소녀의 기도를 듣는 것 같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음악회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니다.(호아시 사회당 의원이 1959년 11월 19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행한 대정부 질의에서 인용함)

유명한 명언이 나오다

이 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일미안보조약의 '사전협의' 문제를 둘러싸고 집중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질의에 나선 사회당의 호아시 의원은 '주일미군이 사실상 사전협의 없이 출동하고 일본이 거부하더라도 미군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하고 정부를 엄하게 추궁하였다.

강한 어조로 사또야마 외상을 몰아붙이던 호아시 의원의 입에서 회대의 명대사가 나온 것이 이 때였다. '사전협의를 소녀의 기도인가!'

그때까지 긴장하고 있던 장내는 일순간 폭소에 휩싸였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당연하지', '틀림없어!', '분명해!'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확실히 이 조약의 이른바 '극동조항'은 최대의 문제 조항이었다. 주일미군의 기지사용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 나라(일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일미군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은 나라는 그 기지와 관계되어 있는 일본을 '적'으로 볼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전협의제도이다. 정부의 답변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 주일미군이 극동으로 발진할 때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투작전행동 뿐이다.
- 전투작전행동은 전투임무를 지시 받은 항공부대, 공수부대 또는 상륙작전부대가 주일 미군기지를 발진기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 사전협의 때 일본은 yes 또는 no를 말할 수 있는데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 일본이 no라고 말하면 미군은 기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본측에 사실상의 거부권이 있다.
- 미군의 자위를 위해서나 한미, 미필리핀, 미대만 등의 상호방위조약의 의무 상 출동하는 경우라도 일본의 안전과 관계가 없으면 no라고 말한다.
- 단 단순한 이동, 기항, 보급, 중개, 급유, 휴양 등을 위해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할 때는 사전협의를 필요 없다.

사실은 일미 교섭 때 일본측은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작전행동을 협의 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관철시켰다. 또 사전동의(prior consent) 안도 나왔는데 이것도 미국의 주장으로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로 결정되었다. 이 거부권 문제는 미일안보조약 비준 시 미국 의회에서 하타 국무장관이 ꡐ사전협의의 경우에는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ꡑ고 증언하였다.

전투작전행동에 한정

그러나 야당측은 ꡐ어딘가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ꡑ하고 정부를 추궁하였다. 그런데 곧 그 함정이 조금씩 드러났다. 사전협의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ꡐ전투작전행동ꡑ의 경우뿐이며 경찰, 경계, 준비, 보급, 전개, 지원 등의 ꡐ작전행동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이처럼 협의대상을 아주 제한함으로써 미국에게 여지를 주게 되어서는 주일미군에게 ꡐ어떤 편법을 써도 괜찮습니다ꡑ, ꡐ다만 믿을 뿐입니다ꡑ고 말하는 셈이지 않는가?

소녀의 기도는 이 같은 야당의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규탄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1964년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개시했다. 캄에서 북폭을 위해 출격 한 B52폭격기가 태풍을 피하기 위해 오키나와(일본본토 북귀 진)에 착륙하여 그대로 북폭을 위해 출동하였던 것이다.

68년 1월 북한의 원산항에서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게 나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정부는 1만4천명의 예비역 장병을 소집하여 전세계적인 긴급태세에 돌입했다.

한편 그 날 일본 사세보를 출항한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해상으로 나오자마자 방향만 틀어 바로 북상하여 원산항으로 급행하였다. 뒤를 따라 항공모함 레인저도 동해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출동에 대해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해상자위대의 카미쓰시마 감시소에서 다만 ꡐ알 수 없는 대형함 통과ꡑ라고만 기록하였을 뿐이다. 동시에 이와쿠니와 오키나와의 미군기 편대도 한국으로 급파됐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이 푸에블로호의 석방을 거부하면 미국은 무력공격도 불사할 태세였다. 물론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다만 미 국무부는 ꡐ일본으로부터 출동한 것은 아니다ꡑ고만 논평하였다. 항공모함이란 항공기든 단순한 작전을 위한 이동이고 전개이며 전투작전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임이 분명하다.

미끼 외무장관의 답변

해를 넘겨 3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끼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ꡒ일본의 시설․구역에서 출발하는 시점, 이것을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해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ꡓ

일단 일본의 영토, 영공, 영해를 벗어나서 전투작전명령이 발령되면 어떤 함선, 항공기, 부대의 전투 참가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끼 장관은 안보조약 개정 교섭 때 아주 강경하게 사전협의 조항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끼의 심정도 착잡하

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사전협약이 이뤄진 적은 이 때까지 한번도 없었고 한편, 극동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일도 없었다.

◆세계평화운동 동향◆

팍스 크리스티 평화 회의를 다녀 와서

변 연 식 평통사 공동대표

잘난 체 지껄이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다.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머니는 그 기가 꺾이리라.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젓더미에 텅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사무엘 상 2. 3-8)

내가 좋아하는 한나의 기도이다. 지난 1년 동안 부시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을 지켜보며 바쳐온 간절한 나의 기도이기도 하다. 이 기도를 미국 뉴저지의 시튼 홀 대학, 전 세계 50개국에서 모인 160여명의 평화 운동가들 앞에서 외치는 기회가 왔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가톨릭 평화군축운동 단체, 팍스 크리스티(Pax Christi International) 국제회의(5월 19일-25일)가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회의에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뉴저지의 아침에...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해 성찰하며 특히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라크 민중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를 생각하며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 뒤에는 잠시 침묵 속에 있어주십시오." 이렇게 말문을 열고 나는 이 기도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 갔다. 기도가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내가 원하던 바였다.

참석자들 특히 미국인들은 놀라워 하였다. 그 많은 성서 구절 중에서 이걸 선택하다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꽤 과격한 기도를 올렸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자괴감은 계속될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크 민중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여인들이 낳아 예쁘게 기른 아이들이 이라크 아이건 미국 아이건 팔레스타인 아이건 가리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며칠째 회의가 계속되고 소그룹으로 나뉘어 여러 주제의 워크숍이 열렸지만, 지금 이곳의 그 누가 이 추악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말인가. 누가 부시를 말할 수 있었던 말인가.

팍스 크리스티도 그 어느 평화운동 단체보다 이라크 전을 반대하며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면 멋진 문장의 결의문과 성명서가 나오겠지만, 그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이 이 추악한 침략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말인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시튼 홀 대학 캠퍼스에서의 그 회의 광경은 거대한 한편의 부조리극 같았다. 자기만족을 위한 작은 몸부림일 뿐이라는 자괴감. 사실 이라크에서 비참하게 참수당한 김선일씨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번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렇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일하고 왔노라고 여러분들과 소식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할 말을 잃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슨 글을 쓰겠는가... (그래서 19일 -22일 회의 중 무수히 오갔던 그 '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자 한다.)

회의 끝자락 5월 22일부터 23일 주말을 이용해서 열린 '희망의 날' 바자는 그 자괴감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 전역에서 팍스 크리스티 회원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중요한 일, 미국 시민들을 무지 몽매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들의 언론이 알려 주지 않는 다른 나라 민중의 외침과 울음을 전해주는 일이다. 자기나라의 상황을 알리는 비디오를 돌리거나 포스터를 전시하고 소식지를 나눠주거나 토산품 물건을 팔기도 한다. 지난번 열린 총을 내려라 평택 축제를 상상하시면 된다.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사진들을 전시하고 한국이 분단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미군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전력했다. 한 장의 사진이 천 마디 말보다 효과적이라는 나의 굳센 믿음 때문이다. 고백하건데 내가 평화 운동에 뛰어들 계기도 우연히 신문에서 본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1994년 르완다에서 살해당한 4살 정도 되는 사내 아이의 사진. 나는 그때 딱 그만한 나이의 둘째 아이를 기르며 때로 얼마나 행복한 어미였던가...

유엔. 워싱턴 정가 그리고 국무부 방문

24일 꼭두새벽부터 예정된 뉴욕의 유엔 방문은 전세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디에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다 정도로 획 돌아보는 관광 수준에 머물렀다. 유엔 본부 건물 앞에 서있는 거대한 조형물, 여기 저기 구멍나고 찢긴 지구의 형상은 오늘 우리 지구촌의 현실이었고 총구가 묶어져있는 거대한 총의 형상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였다. 유엔이 제구실을 할 날은 올까? 본부 바로 앞의 국제 전범 재판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아프리카 친구들이 열심히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르완다, 콩고, 수단... 십여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정체를 모를 비행기가 폭격을 해대어도 그 어느 나라 하나 관심을 갖지 않더니 어디 어디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고부터는 여러 손님(?)들이 오고 가며 바쁘다고... 내전으로, 종족 분쟁으로 배후조종하여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싸우게 하고 뒤에서 웃고 있는 놈들. 멋지게 생긴 백인여성과 남성이 심각하게 고개를 주억거리며 듣고 메모한다. 여기서도 하하 웃고 싶은 부조리극이 공연되고 있다. 워싱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가 물었다. "그런데 저 전범 재판소 사무실에서 부시를 전범으로 기소할 날은 언제일까요?" 아무

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 트리니티 대학에 짐을 풀자마자 우리 일행은 미국 주교회의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국제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만나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2003 북한 자유법안과 2004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우리 시민 단체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전하였다. 그도 이미 그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의 시민 단체는 수차례의 모임을 가지며 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권고문 형태의 성명서를 만들었는데 이번 회의와 워싱턴 방문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문서가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런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98년 이라크해방법(PL 105-338)을 제정하여 이라크에서 민주정부 수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반정부세력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타 원조도 이루어 지도록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라크 내 민주주의의 진작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표방했던 이 법안은 이후 이라크 침략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라크 해방법과 북한인권법안은 목표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인권법안이 향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리셉션에서 만난 마이클 도드 신부님은 한국에서 10여년 정도 사신 분인데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도 여기저기 열심히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말로 "이 사람들 무서운 놈들이예요."하신다. 그 벽안의 늙은 신부님에게서 들은 말 "무서운 놈들이예요."가 자꾸 귓가에 맴돌며 잔디가 페르시아 카펫처럼 펼쳐진 길을 걸어 숙소로 돌아 왔다. 미국은 땅도 넓구나... 하늘에는 낫달이 떠있고 그럼에도 벌써 가로등은 켜져 있다. 넘쳐나는 일회용품들과 전기의 과도한 낭비. 숙소에서는 에어컨이 쉴새없이 돌아간다.

다음날은 이번 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하루 종일 '이 무서운 놈'들 속으로 들어가 소위 로비 하는 날(Advocacy Day)이었다. 의회 정책 보좌관들과 국무부 관리를 만나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정책에 참고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이다. 주최측은 아무리 어려 보이는 보좌관들을 만나더라도 절대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였다. 요즘은 좋은 대학원을 나와서 정계에 바로 투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몇 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활동에 들어갔는데 내가 속한 그룹은 인도, 뉴질랜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의 원숙한 평화운동가들로 구성되었다. 한분의 할아버지 박사님과 세분의 멋진 중년 여성들. 정책 보좌관들과의 만남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고 갔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말들이었고 주로 부시 정부를 혼내주는 말이었다. 당연히 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 단체의 성명서는 우리 그룹이 가진 가장 구체적인 문건이 되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위한 옹호의 날이 되어서 마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나를 못살게 구는 누군가를 점잖게 혼내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 "미국, 이러면 안되지요. 진정한 초강대국이라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지. 이게 뭐니까. 이라크 침략하기 전에 이라크 해방법 만들고. 이제 북한 치기 전에 북한 인권법 만듭니까?" 마침 우리들의 손엔 호주 팍스 크리스티에서 발행한 소식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이라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Korea : how to avert another Iraq)가 들려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국무부의 핵 비확산국(Bureau of Nonproliferation)에서 앤드류 썸멜 부국장(Andrew Semmel: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Nuclear Nonproliferation)과 다른 두 사람의 관리와 만나서도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오전 중에 의원회관에서 실전 연습이 된 탓인지 꽤 내용도 풍부해졌다. "이런 법안 만들지 말고 북한과 불가침조약 체결하고 진정 그렇게 인권 생각하신다면 경제 제재부터 빨리 푸세요. 소위 말하는 북한 핵문제의 뿌리가 미국의 제네바 협약 위반에 있는 거 아시죠. 핵을 가진 국가가 핵무기로 선제공격하겠다고 하면 어찌자는 겁니까?" 그 중후한 인상의 부국장이 대답했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어느 기자회견에선가 불가침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이 마당에 어떻게 부시 말을 믿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협정을 맺어야지." 하고 응답하였더니 그들 모두가 갑자기 뚨은 표정을 지었다. 부시 앞에 대통령 자를 안 붙여서 그런가? 사실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대접을 받고 그 방으로 안내 되었었다. 내 여권은 며칠 전에 복사되어 들어가 있었고 이중 삼중의 검색대를 통과하기는 하였지만 현관에서 꽤 높으신 분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지난 2000년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방미 투쟁 단으로 워싱턴에 왔을 때 비를 맞으며 국무부 앞에서 초라하게 데모하던 생각이 났다. 그때가 우리끼리의 투쟁이었다면 이번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 평화운동 단체와의 연대속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형태의 운동이라고 할까?

한국에 돌아와 뉴질랜드의 주디뜨 어머니(!!)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We were in the halls of power of the US!!! (그 날 우리는 미국이란 권부의 전당에 들어가 있었지!!!)" 미 국무부의 핵심에 들어가서 초라하게 굴지 않고 일갈하고 나옴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이 배어난다. 이렇게 해서 또 한사람의 친구를 뉴질랜드에 갖게 되었다.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사람들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간다. 오늘 느끼는 참담함과 슬픔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운동... 험하지만 가야 할길... 실천 가능한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과정에도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피켓 한 장이 이 지구상의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어디로 튀어 한 생명 구할지 모른다. 우리가 벌인 농성이나 로비가 그 누구의 심장을 움직일 지 알 수 없다. 우리 모두 힘내자!!! 다시 평화운동 현장으로 나아가자!!!

◆ 통일 ◆

북핵 프로그램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까지 불러올까

이 재 봉
원광대학교 정치학/평화학 교수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 대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6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 3차 6자 회담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회담에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통적 요소들이 있다는 북한측 견해도 있고, 돌파구도 없이 회담이 끝났다는 미국측 시각도 있으며, 성과가 풍성했다는 중국측 의견도 있고, 이제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남한측 해석도 있는 가운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이다. 작년 4월의 3차 회담과 8월의 1차 6자 회담 그리고 지난 2월의 2차 6자 회담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실질적 협상을 위한 어떤 제안을 가져온 적이 없고, 북한이 무조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주장해왔을 뿐인데 말이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과 양자 접촉을 의도적으로 꺼려온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측에게 미국의 제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이고 진지한 협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미국이 내놓은 협상안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기 시작하면 중유를 지원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폐기를 시작하면 북한에 대해 안전 보장, 경제 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등에 관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북한과 타협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북한은 두 나라가 동결과 보상에 관한 행동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를 떼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는 포기하되 에너지를 위한 핵활동은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셋째, 북한은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으니 그에 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는데, 미국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그것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다그친다.

이렇듯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불신과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핵심 쟁점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피와 배짱이 대단하고 미국은 힘과 오기가 세계 제일이라 서로 양보를 하며 협상을 벌인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 다, 특히 미국은, 자존심만 내세우기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니 머지 않아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리라 기대한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는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본이나 남한의 경제 지원조차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면 상당한 돈과 경제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일본은 수교 협상에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이 억지와 오기와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

지만 그래도 아쉬운 쪽은 북한 아닌가. 아무리 배짱과 자존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체제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경제 상황을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유연성도 보이며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이라크 침략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와 관련된 것이지 외교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죽고 다치는 것은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 핵문제가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부쉬가 수세로 물리는 처지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민주당의 거센 비난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한편,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미 관계가 더 쉽고 빠르게 진전되겠지만, 부쉬가 재선되더라도 북한에 대해 적대 정책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한도 미국에게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은근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 일본은 아직 미국의 꼬봉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수교를 위해, 남한은 여전히 종속적 처지에 놓여 있지만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세력의 확장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 정책을 무턱대고 따르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리라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온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의 핵공격 위협일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은 미국이 먼저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북한이 오래 전부터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을 요구해온 배경이다. 그런데 이른바 '호전적인 강대 국가' 북한은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불가침 조약이나 한반도에서의 어정쩡한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 한국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을 맺자고 줄기차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민주와 평화'를 들먹거리며 미국이 이를 끈질기게 거부해온 배경은 바로 주한미군에 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이 맺어지든지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들먹거리기 어렵게 되고,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핑계를 잃게 되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구멍이 뚫리게 된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가장 큰 대외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새로운 안보 협약을 맺는 한편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세웠는데 말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미국의 군사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 전쟁을 통해 첨단 무기의 엄청난 효과를 맛보면서 병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도 이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21세기 전쟁에서는 육군 중심의 대규모 병력이 별로 소용없기 때문에 신속 기동군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대형 헬기를 비롯한 수송 수단의 개발로 세계 어디로든 수단 병력을 1주일 안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데다, 과거 소련과 맺었던 미사일 제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개발해오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까지 머지 않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더라도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될텐데, 굳이 주한미군 때문에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물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는 미국 네오콘들의 주장이나 남한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미국이 북한을 쉽게 폭격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고, 나의 긍정적 전망대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의도가 어느 쪽이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미국이 탄축을 걸어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굳건한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감축과 재배치에 머무르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물러갈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산소음피해 배상소송◆

군산 미공군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경선 변호사

1. 들어가며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는 파괴되어져 가고,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은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더 이상 사치스러운 구호가 아니고, 환경권 역시 법전에 갇힌 권리가 아닌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권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수십년 동안 강요된 침묵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도 작은 몸짓을 시작하였다.

2001년 여름, 매항리 미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소송의 승소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힘을 얻어 녹색연합 산하 환경소송센터와 뜻을 같이해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2.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주민들이 1945년 이후 설치된 미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 등을 원인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및 일상생활 방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소음감정 결과 주민들의 거주지역에서 전투기 소음이 항공법상 피해 예상지역인 80WECPNL이상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였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소위 한미행정협정)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의 "공작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즉 영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의 결여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할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해석을 하였고, 피고가 항변한 위험에의 접근이론과 관련하여서는 비행장 설치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부모들과 함께 이주하였거나 결혼을 원인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3. 의의와 전망

첫째, 위 소송은 매향리 소음 피해소송과 함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것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공군기지 및 사격장의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군기지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던 인근 주민들이 국가안보와 미군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수하였으나 위 소송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현재 많은 유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전배상에서 더 나아가 비행금지청구가 제기되지 않았고, SOFA규정에 의해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이 환경문제들의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은 법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동일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행정은 이에 기속될 것이며, 입법부의 법개정 및 법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단체 등 환경운동가들이 길거리 투쟁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기관인 사법부를 통하여 주장을 관철시킴으로 인해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많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조삼모사식의 행정부에 대해서도 더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한 승소판결은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 등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많은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현장을 지키며 삼보일배, 단식 등을 통한 소송외적인 투쟁을 하고 이로 인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인해 재판부의 성의있고 심도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연대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환경분쟁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비에케스◆

싸움은 계속된다

녹색연합 간사 고이지선

지난 4월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Koo-Ni Range)이 폐쇄될 것이라는 발표가 났다. 그것은 십년 이상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주민들이 일구어낸 결과물이며,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미 해군 사격장 폐쇄에 이은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미 폐쇄되었고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에케스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쿠니 사격장 폐쇄 이후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 해군은 서인도 제도의 푸에르토리코 동쪽에 자리 잡은 작은 섬 비에케스에서 60년 이상 폭격훈련을 가했다. 그 기간동안 미군은 네이팜탄, 열화우라늄탄을 투하하였고 그로 인해 비에케스 사람들의 암 발생률은 푸에르토리코의 다른 지역보다 30%가 높다. 어떤 산업시설도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테스트에서 44%에서 수은, 73%에서 알루미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미군은 비에케스에서 있었던 미군의 훈련으로 인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4월 7일자 해군 장교인 Gordon England는 주민 조직에 보낸 편지에서 비에케스의 환경 재앙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보고서들은 비에케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고, 12개 오염 지역과 23개 오염우려 지역이 가려졌다. 특히 하버드 의대의 독극물학 박사인 Ernest Chiodo 와 예일대학의 환경 및 공중보건연구소의 John Wargo 박사는 미군의 폭격 훈련이 비에케스의 중금속 오염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미군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증거들을 무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규모 기금인 슈퍼펀드(Superfund)가 있다. 1980년에 제정된 슈퍼펀드법을 통해 환경오염 지역에 대해 신속히 배상 처리하고 사후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 배상법 체계 하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배상액이 결정되지만, 슈퍼펀드를 통해서 긴급하고 심각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자금을 투입하여 환경을 복원하게 된다.

슈퍼펀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재 비에케스 주민들은 이 절차없이 등록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슈퍼펀드를 통하더라도 환경 복원에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와이에 있던 Kaho'olawe 사격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포탄의 70%를 제거하는데만 10년이 걸렸다. 비에케스의 경우는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며 훈련의 강도도 심하기 때문에 최소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에케스의 미래

비에케스의 미래는 주민들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으며, 아름다웠던 자연은 파괴되었는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

다.

비에케스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세계 도처에서 미군들이 보여 주듯이 주민들의 투쟁없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폭격훈련장이 폐쇄된 비에케스에는 거대 국제 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200개가 넘는 객실을 가진 호텔들과 골프클럽들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결국 돈은 외부로 유출될 것이고, 관광산업은 주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 문화유산을 살릴 수 있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매향리 공군 폭격장뿐 아니라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진정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곳뿐 아니라 비에케스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주민들은 대규모 리조트 건설 반대운동뿐 아니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여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비에케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설득하고 있다. 하워드 딘(Howard Dean)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버몬트 주지사가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0일 이곳의 CRDV(COMMITTEE FOR THE RESCUE AND DEVELOPMENT OF VIEQUES, 비에케스의 지원과 개발 위원회)는 100여 명이 사람들과 함께 고깃배를 타고 과거 미 해군 훈련장을 돌아보았다. 1999년 David의 죽음 이후 1년 동안 지속된 Peace 캠프 활동이 훈련장을 폐쇄시켰지만 이후 정부는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 자연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무관심한 정부와 미군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정부와 미군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

현재 비에케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인다. 사격장 폐쇄가 긴 싸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가 폐쇄되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소식◆

안녕하세요?

전국의 평통사 회원, 후원회원 여러분!

유한경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저는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유한경입니다. 인천평통사 사업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월 1일 대전충남평통사로 이적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을 맡은 지는 이제 두 달이 되었네요. 대전충남평통사에 실무자가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오혜란 조직국장님의 권유로 기꺼이 대전시민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지요. 나이는 35세, 미혼이구요. 155센티 아담한 키에 55Kg의 통통(?)하고 건강한 체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음, 지금은 결혼한 친언니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심한 저였고, 평통사의 비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감사히 생각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숙소, 활동비, 낯선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담 등등. 그런데 결국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이 다 해결해주더군요^^. 지난 6월 뜻밖에 친언니가 대전으로 이사오기 전까지는 오은아 총무부장님이 방 하나를 내주고 한가족처럼 보살펴 주었구요. 지난 4월부터 1인 시위 등 사업을 조금씩 벌려나가니, 회비 수입이 5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늘어 8만원의 식대와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야하는 부담이요? 그거 만만치 않았습디다. 처음에 대전에 오자마자 사건을 하나 터트려서 정말 큰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탄핵 촛불시위가 한창일 무렵 대전충남평통사 카페에 문제가 있는 글을 퍼 날랐다가 불신을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첫발을 잘못 내딛어 큰 부담을 안고 시작했지만 함께 투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쟁과 실천이 약이더군요^^.

글을 쓰고 있는 여기는 대전시 중구 목동성당입니다. 웬 성당이냐구요? 대전충남평통사 사무실이 목동성당 안에 있거든요. 유희규 신부님이 대전충남평통사의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공간을 내주셨습니다. 약 15평의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공과금을 한푼 안 내고 있죠. 선풍기가 없어도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 시원한 사무실입니다. 부러우시죠? 그러면 대전으로 오십시오. 언제나 대 환영입니다.

저는 지금 '이라크파병반대 대전시민행동'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난 후 피켓과 깃발을 챙겨 대전역 촛불시위에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1일부터 많게는 200명 지금은 60여명이 참가하여 열리는 촛불시위에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이 많지는 않지만(현재 회원 62명/후원회원 20명) 항상 4명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대오의 맨 앞에

매일 업그레이드 된 딱딱딱한 피켓을 들고 참가합니다.(절대 자랑 아님)

대전충남평통사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이 글을 계기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있구요^^, 회원/후원회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평통사는 'FX사업 양심선언 주인공 전직 조주형대령'(보도자료에 즐겨쓰는 글귀입니다.), 목동성당의 유이규 주임신부님(얼마전 타계하신 최초의 인권변호사 고 유현석님의 아들입니다), 대전에서 20년 간 사회운동을 해오신 유병규님, 이렇게 3분이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회원(후원회원 포함) 82명 중 특이사항은 목사님이 17명, 대전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홍성지역 회원이 17명, 목원대 신학대 학생이 10여명이고, 한달 회비 수입은 7~80만원, 목원대 학생분회와 평화분회가 한 달에 한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홍성모임을 별도로 가지려고 추진 중입니다.

저는 대전충남평통사의 사무국장으로서 올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원 목표는 현재 정회원 62명을 100명으로, 2006년 1월까지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분회활성화와 확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하루 한 명씩 돌아가면서 10일 정도는 거뜬히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준비, 5명 정도 참가하는 주 1회 캠페인, 월 1회 회원교육, 지난 서울, 인천, 부천시부 체육대회처럼 이웃지부인 전북평통사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대전충남평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 5일 정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고, 캠페인은 월 1회 정도, 회원교육에는 많게는 3월에 18명에서 적게는 지난 6월 7명 참가, 체육대회는 현재로써는 될까 싶어 시도는 안 해 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소중한 목표들입니다.

제가 대전충남평통사에 이적을 한지 석 달이 채 안되었지만 그동안 1인 시위, 캠페인, 무기장난감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기, 분회모임, 촛불시위 등 회원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는 주옥같은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한겨레신문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정독하는 강력한 '과병반대론자' 오은아 총무부장님, 아직도 평통사를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지만 동료들만 만났다하면 평통사 노래를 부르며 자랑하는 건설노동자 고준택 회원님, 바빠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용산관련 서명을 혼자서 380명이나 받아다 준 김지수 회원님, 평통사라면 사죽을 못쓰고 항상 1인시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언제나 불러만 달라는 열혈 청년 송원준 회원님, 산악반 깃발을 자비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등산반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박찬 회원님, 평택농활을 다녀온 후 회원으로 결합하여 모든 모임과 실천에 반드시 참여하는 정한섭 회원님, 몇 년만에 40명이 모이는 홍목사님 강연을 준비한 이영석 목원대 학생회원, 회지를 항상 정독하시고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안빠지시는 박규용 운영위원, 저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그래서 더욱 가까워진 최재준 운영위원 등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더 열거하고 싶은 회원들이 많지만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까지... 회원님들 섭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들에게서 대전충남평통사의 발전과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봅니다.

아직은 하루종일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대전충남평통사 사무실에 홀로 앉아 도시락을 까 먹으며 홈페이지관리, 피켓만들기, 일정 핸드폰 문자날리기 등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과 투쟁속에 보석같은 회원들을 하나하나 만나가면서 그날을 상상해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구요? 적어도 인천평통사처럼 상근자들이 돌아가며 식사당번과 청소도 하고 때로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울그락 불그락도 하고, 분회모임이 겹쳐 사무실이 좁다고 아우성을 칠 날이지요.^^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여러분께 대전충남평통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전충남지역에 사시는 지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전충남평통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42)223-8812/ 019-805-2830 dcspark925@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평화와 통일의 한길에 저, 그리고 대전충남평통사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연합의장 인터뷰◆

이 행 우 자주연합 의장님과의 대담

인천에서 열린 6.15 우리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국을 찾은 자주연합의 이행우 의장님 그리고 자주연합에서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 재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재수 선생님께서 6월 18일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평화누리 통일누리 독자분들을 위해 두 분과의 대담을 신는다.

-편집자 주

□일 시 : 6월 18일

□장 소 : 평통사 사무실

□정 리 : 김현진 홍보부장

▶ 회지 독자들을 위해 의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의장 1968년 미국 퀘이커교도(Quaker)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1년 동안 퀘이커 역사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전공이 수학인데, 컴퓨터로 전공을 바꿔 지금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업으로 해왔습니다. 퀘이커들이 절대적인 평화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전쟁반대, 평화군축 등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운동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와 통일운동에도 관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자주민주 통일 미주연합 의장으로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단체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재미동포전국협의회(나카) 부의장, 한반도평화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eace in Korea) 집행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 자주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의장 90년대 초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운동이 저조한 때가 있었는데, 미주에도 그런 경향이 왔습니다. 운동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우리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94년 여러 단체가 '북미주 동포연합'을 결성했죠. 이 단체는 회의체로서 공동의장제로 운영되었는데 몇 년 뒤 좀 더 강력한 연합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이 결성됐습니다. 자주연합은 98년에 결성됐는데 지금이 3기입니다. 지금 통일운동 상황을 보면 남쪽과만 연대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북쪽하고만 연대하는 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남쪽과도 연대하고 북쪽과도 연대하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통일운동을 하고 있죠. 통일운동 하는 단체가 여럿 있지만 남과 북 모두와 연대하는 단체는 자주연합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전에는 우리가 회담을 주선하는 등 남쪽과 북쪽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했죠. 8월 통일대회와 관련하여 95년 베이징 남북

대표자 회담이나 96년 바르샤바 회의도 저희들이 주선했죠.(참고로 이 회의 때 이의장님이 직접 해외 대표로 참석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에 관해 회고록을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 편집자 주)

▶ 자주연합의 실무일꾼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의장 사무실은 있지만 상근자는 없습니다. 주중에는 각자 일하고 필요할 때 저녁에 모여 회의를 하고 교육도 하고, 주말에는 나가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회원 모두가 상근자인 셈입니다. 서울서 온 어떤 분들은 사무실은 큰데, 상근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연구단체나 정책개발단체가 아니고 대중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 자주연합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국장 남쪽의 민족민주단체들의 활동과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중사업이나 정치투쟁 등을 하고 있고, 최근 남쪽 운동진영과의 연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남쪽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일정 잡는 등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구요. 미선이․효순이 사건도 워싱턴에 와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주운동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미국 내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나 인권단체, 로비단체를 상대로 한 연대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소수 민족운동단체들, 제3세계 운동단체들과도 연대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문제이다"는 것을 홍보하고, 다른 민족들의 고민과 투쟁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법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그것을 저지하기 하기 위한 로비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로비역할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 작년에 열린 7.27 한반도 평화대회와 올해 열리는 7.20 한반도 평화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이 의장 작년에 정전 50주년을 맞아 "50년 동안이나 정전협정이 뭐냐. 평화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주의 동포 단체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포럼도 하고 우리끼리 토론회도 하고, 백악관 앞을 행진하는 데모도 했죠.

이 국장 작년 7.27 평화대회는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동포단체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담이지만 각자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연대하기 쉽지 않은데...(웃음) 그런 의미에서 미주운동의 현 주소를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근수 목사님, 고영대 위원장, 김종일 위원장도 참여했죠.

올해 열리는 7.20 행사는 그 명칭이 'Korean Peninsular Peace Forum'으로 남쪽에서는

국회의원, 북에서는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미국의 의회 등 소위 입법부를 담당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그들이 어떤 복안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행정부로 하여금 채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열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제를 하고 한반도 전문가들, 학자들, 언론인들이 토론하고 일반 참석자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Korea Society, 미주동포전국협의회(NAKA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in Korea 세 단체가 주최하고, 자주연합은 후원단체로 참가합니다. 자주연합은 통일운동에서 강성으로 통해서 이런 행사는 NAKA 이름으로 하지만, 실무는 자주연합 회원들이 많이 합니다. 같이 이름을 쓰면 같이 강성으로 통하니까.. (웃음) 자주연합은, 주로 현장 투쟁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 이 의장님께서 북한 자유법안 철회를 위한 미 의회 로비활동을 활발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북한 자유법안은 작년 11월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됐어요. 정식 명칭은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입니다. 그것을 보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북한 인권문제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핵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6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북한 자유법안이 통과되면 6자 회담은 끝난 것이나 다름 없게 돼요. 금년 3월에 하원은 법안 명칭을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으로 바꿔서 재상정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고, 하원에서는 북한 정권교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바뀐 법안에는 북한 정권교체가 아니더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니까 원래 9명이 발의했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29명까지 늘어났습니니다. 바뀐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니다. 우리는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지난 6월 11일 의회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과 한국에 대해 내정 간섭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아주 고약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 인데도 동포사회에서 지지 서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1개 단체가 4월 29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뉴욕 케이블 TV로 한 시간 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6월 1일과 7일 각각 방영했습니다.

▶ 6.15 우리민족대회에 참석하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의장 아주 좋았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쪽에서 주최하는 남북공동 행사에 처음으로 해외 동포를 초청한 점입니다. 이번이 4회 재인데 작년만 사스 문제로 초청을 못 받았고 나머지 북에서 열린 1회, 2회 모두 초청 받아 갔습니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8.15 대회 등 행사에 해외를 한번도 안 불렀습니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불려서 들어왔습니니다. 거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동포로 미국에서 10명이 왔고, 다른 해외동포까지 합치면 59명이 왔습니다. 한편 북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지만 젊은 전경들을 죽 세워놓고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일부 범민련하고 한총련 소속 몇 사람을 참가 안 시켰는데 이는 6.15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장 저는 19년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민족대회는 남북해외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하고 인천시장이 직접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발전된 모습을 느꼈습니다. 6.15 시대가 진짜 시작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라톤 하는 데 인천 시민 1,500명이 참가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순서 배치를 제일 앞에 북쪽 사람들, 중간에 해외 동포들, 맨 뒤에 남쪽 시민들로 했는데 마라톤이 시작되면서 서로 뒤섞여 뛰니까 화해와 협력시대라는 것이 이런거구나 하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잉으로 안전을 보호해 줘 호텔에서는 출입하는 우리들보다 정보 요원들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 평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활동이 미국 상대로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미국 국회나 행정부에 반드시 전달돼야 할 내용들인데, 저희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자주연합이 해 주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만.

이 의장 홍근수, 문규현 두 상임대표와 그 전부터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이처럼 연구하고 활동하는 단체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반대하는 평통사의 한국 국방부 앞 농성 사진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싸우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싸워서 신문에 나도록 하고 또 문서로 만들어 미국의회에도 직접 보내야 합니다.

미국 국회를 상대로 평화군축 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들 단체들과 연대해서 활동하면 저희가 알선해 드리고, 숙소 등도 마련해드리고 할 테니 현지에 와서 같이 활동했으면 합니다. 미군문제 등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평화군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니, 미국 현지에 와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지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탐방◆

류성훈

언제부터인가, 집회나 기자회견 자리에서 머리카락에 잔뜩 젖을 발라 세운 동그란 눈의 젊은이가 띠기 시작한다.

지난 6월 29일 '37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리는 국방부 민원실 앞.

인터뷰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는 이 젊은이. 어색한 웃음을 보이지만, 뒤로 빠지는 않는다.

집회를 마치고, 서울 사무실로 들어와 시작한 인터뷰는 시종일관 웃으며 진행되었다.

워낙에 웃음이 많은 걸까?

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자격증도 2개나 보유하고 있는 능력자이지만, 영어가 약간 부족해서 휴학중인 대학 4학년, 24살. 류성훈 회원!

평통사에 가입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동석형 소개"라고 짧게 대답한다.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인 정동석 회원의 학교 후배란다. 선배가 권유했다고 해서 덩석 가입하거나 하진 않았을 텐데, 역시나 "(평통사가) 항상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라고 한다. 가입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이전부터 평통사의 활동은 꾸준히 봐 왔나 보다.

젊은 아들의 평통사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은 무어라 하실까?

"아버님이 군인이셨기에(지금은 퇴직하셨고) 집안 분위기가 약간은 보수적이에요, 평통사 활동하는 거 정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대충은 아실거예요. 집으로 배달되는 회지(평화누리 통일누리)를 보시고 어머니가 '너 평화 어쩌구 하는데 가입했냐? 거기 이적단체 아니냐?' 하셨어요. 그냥 웃고 넘겼죠."

'대학생-한총련-이적단체' 라는 연관속에서 아마도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내친 김에 요즘 대학의 분위기를 물어봤다.

"학내에서 교육재정 문제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용산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난번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왔는데, 학우들과 함께 한다는 출범식에서 구호도 별로 안 외치고 그러더라구요. 랩하는 애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여학생들이 야한 춤을 추고...공연을 그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대중화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약간은 실망했었죠"

휴학하는 기간동안 학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영어공부를 주로 했다는 그는 인천평통사의 통일분회원이자 노래모임 '소리나무'의 성원이기도 하다. 다음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건강 문제로 군대면제를 받은 그는 그래서일까 아직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장래에 대한 불안이 없을 리가 없겠지.

평통사의 활동이나 운동에 대한 고민이 풀여놓은 얘기보다 훨씬 더 많겠지.

하지만 어째라, 오늘 못다한 그의 고민들이 실천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내일이 있는 걸..평통사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말이다...

추신.

여자친구는 없지만, 친구의 여자친구하고는 쉽게 친해진다는 그!

순진해보이는 얼굴 뒤에 숨겨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외의 '작업남'일 수 있겠다.

이 친구를 조심하라!!

정리 | 오미정